

與 불참 “국익 도움 안돼”… 野 질타 “피해자 의견 외면”

외통위 현안 질의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안 등 질의 민주당, 당정 불참 ‘국회포기’ 공세 규탄 결의안 상임위 단독처리 제안 양금덕 할머니 “3자변제 안 받아”

‘제3자변제’를 핵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안을 놓고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에서 야당과 피해자 측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16일)을 앞두고 외통위 현안질의를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불참했다.

민주당 측간사인 이재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법 제50조 5항을 들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해 외통위 현안질의를 열었다.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정부 인사는 불참한 채, 야당 의원들이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법률대리인 김정희 변호사, 최봉태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위 위원장에게 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여당이 외통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정부 규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위에 불참한 것이 곧 일본 정부와의 협상력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병석 의원은 “중요한 국가의 대사를 앞두고 정부여당이 출석하지 않고 국회를 포기한 것에 대해 대단히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의 대의기관이 국민을 대변할 수 있다는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과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협상의 과정에서 우리가

잘못 판단했던 것을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며 “(또한) 반대 목소리가 (정부안에) 반영됨으로써, 앞으로 있을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정부여당이 (외통위에) 출석하지 않고 또 다시 약점을 보이고, 한국 정부가 제안한 안이 국회를 열 수 없을 정도의 국민과 야당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취약한 안이라는 것은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원욱 의원은 야당 단독으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정부 해법안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임위 차원에서 처리하자고도 제안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양금덕 할머니는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안이 아닌, 한국과 일본의 재계단체가 기금을 모아 지원하는 ‘제3자변제’에 대해 “나는 절대로 굶어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은 안 받는다”고 반발했다. 이어 “내가 어려서 너는 공부 머리

가 좋으니 일본 가서 공부도 하고 유학도 보내준다고 해서 갔는데 일만 쇠빠지게 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있어도 자식들이 있고 나라에 세금 물고 다 할만 큼 했다. 이렇게 살아도 누구 하나 지금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하나 없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외교부가 배상안을 발표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상당수가 조속히 종결되기 바라고 있다’고 말한 점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정희 변호사는 “알리바이 조성용이라고 생각한다. 양 할머니를 비롯한 공동원고 5명 중에 외교부가 만난 것은 양 할머니가 유일한 것 같다”며 “피해자의 의견을 들으려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답을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반복했던 취지였던 것 같고 피해자 측의 의견이 정부안에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재정 대표 주재로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대정부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박태훈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친윤 중심 ‘연포탕’ 인사… 이철규 사무총장 임명

(연대·포용·탕평)

국민의힘 지도부 당직 인선

지명직 최고위원 등 비윤 인사 발탁 안철수 의원 회동… 당 안정화 논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친윤’(親 윤석열) 인사를 주요 당직에 전면 배치하는 한편, 경쟁자였던 안철수 의원과 만나 연포탕(연대·포용·탕평) 정신도 내세웠다. 친윤 중심의 내부 결속 강화와 함께, 내년 총선 대비 차원에서 외연 확장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13일 최고위원회에서 사무총장과 함께 전략기획부총장·조직부총장, 당 대변인단 등 주요 당직 인선을 의결했다. 당 살림살이와 함께 내부 조직 정비도 책임지는 사무총장은 친윤계 재선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하우스 카페에서 회동, 인사하고 있다. /뉴스시스

척·정선) 의원을 임명했다.

신임 이철규 사무총장은 친윤계 공부 모임인 ‘국민공감’ 총괄간사를 맡고 있다. 과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

철규) 인사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사무총장 직속인 전략기획부총장·조직부총장도 각각 초선그룹 내 친윤계 핵심 인사가 맡았다. 전략기획부총장은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이 임명됐다. 조직부총장은 배현진(서울 송파) 의원이 임명됐다.

대변인단 역시 친윤계 인사들 위주로 등용됐다. 유상범(조선,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수석대변인은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다. 강민국(조선, 경남 진주) 수석대변인도 친윤계 인사로 꼽힌다. 윤희석·김예령 대변인은 지난해 대선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에 대변인을 맡은 적이 있다.

다만 김민수 대변인은 나경원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준비를 도운 인사

로 김 대표가 ‘연포탕’(연대·포용·탕평) 정신 계승 차원에서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가 최고위원과 협의해 임명하는 지명직 최고위원 또한 과거 유승민 전 대표와 가까웠던 강대식(조선, 대구 동구) 의원이 임명됐다. 하지만 강의원은 지난 1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규탄하는 초선그룹 공동성명에 동참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유 전 의원과 멀어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별개로 김 대표는 같은 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안철수 의원과 만났다. 전당대회 기간에 치열하게 다투면서 발생한 ‘내홍’ 수습 차원에서 만남이었다. 이들은 전당대회 이후 첫 만남에서 당 안정화와 내년 총선 승

리를 위한 노력 등에 공감했다.

안철수 의원은 김 대표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치열한 경선 이후 김 대표 체제가 됐으니, 안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년 총선 승리에 있어 수도권 승리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 민심을 용산(대통령실)에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안 의원은 “내년 총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 당분간 숙고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김 대표에게) 말했다. 지난 2년간 선거를 다섯 번 치르면서 많이 지쳤고, 재충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안 의원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고, 김기현 지도부 체제가 확실하게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민심을 잘 녹여낼 수 있도록 대통령을 포함해 (당과) 정부 사이에 역할을 잘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고 밝혔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尹 대통령 “SVB 파산, 국내 실물경제 파장 면밀히 점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 브리핑 금융시장 불확실성 사전대응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관련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SVB의 파산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SVB 파산 요인, 사태 진행 추이, 미 당국의 대

처,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벤처기업·스타트업의 자금줄 역할을 한 SVB는 최근 유동성 위기를 맞은 후 파산했다.

이로 인해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심리적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지시는 금융시스템 재점검 등을 통해 사전 대응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

계를 위해 정부의 각 부처가 분야별 협력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달라”고 한 총리에게 당부했다.

이에 한 총리는 “새로운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분야별 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구체화 작업을 하겠다”고 보고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 한일 정부가 일본 피고 기업의 ‘미래청년기금’(가칭)에 참석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그런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고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당정,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추진

조합원 50% 이상 요구시 회계 의무 공개

국민의힘과 정부가 13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노동현장 폭력 등 불법 행위 근절 차원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갖고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 ‘거대 노조의 괴롭힘 방지’ 차원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김기현 당 대표 취임 후 처음 열린 민·당·정 협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가운데 노동을 주제로 한 만큼, 당 차원에서 정부 정책 뒷받침에 노력할 것이라는 행

보로 풀이된다.

당정은 회계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했다.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규약, 조합원 수, 결산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단, 조합원 50% 이상 요구 또는 배임·횡령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안이 발생해 장관이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회계 공시와 세제 혜택을 연계하는 방안은 관계 부처 간 협의로 빠른 시일 내 추진하도록 했다.

/최영훈 기자